

국민안전 체감도 소폭 상승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체감도가 지난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과 중·고생, 전문가 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 전반적인 안전 체감도는 지난해 하반기 5점 만점에 2.77점으로 상반기(2.64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포함지진(11월), 제천 화재(12월) 등 재난·사고에도 긴급 재난문자 발송, 수능연기 결정 등 정부의 신속한 현상 대응이 긍정적

작년 하반기 3600명 안전체감도 조사 '상반기 2.64점→하반기 2.77점' 개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체감 안전도(3.53점)는 사회 전반(2.77점)의 안전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안전의식 수준'도 2.73점인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2.70) 보다 소폭 올랐다. 전문가(2.85점)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반기 대비 상승폭이 컸다.

학교·성·가정폭력 안전 체감도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3.61점으로 상

반기(3.58점) 대비 소폭 올랐다. 전문가의 경우 체감도 상승폭(0.24점, 3.22점→3.46점)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2.79점으로 상반기(2.75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청소년의 안전 체감도(2.73점)는 상반기(2.88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안전 체감도는 각각 2.73점, 2.91점으로 상반기(각각 2.79점, 3.01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자연재난, 산업재해, 범죄, 화재, 신종 감염병 등 12개 재난안전 유형별 안전도는 상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사이버 위협(2.30점), 환경오염(2.39점), 교통사고(2.43점)는 상·하반기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추진 등으로 원전사고(2.96점) 유형의 경우 상반기(2.68점)에 비해 안전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김부겸 행정부 장관은 "올해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문제 관행을 근절할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英4남매, IS 참수 영상 보게 한부모 신고

영국에서 4남매가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인질 참수 영상을 억지로 보게 했으며 부모를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1일(현지시간)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영국 중부에 살고 있는 18세, 16세, 14세, 10세 소말리아계 4남매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IS의 인질 참수 영상을 보아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첫째인 18세 소녀가 아동상당단체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자 수사에 돌입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아이들이 심리적 화대를 받았다고 보고 부모로부터 격리시켰다. 아이들은 현재 아동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10세 막내는 학대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아이들의 부모가 가정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했으며 반 영국, 백인과 동성애 혐오주의가 담긴 견해를 종종 내비쳤다고 전했다.

부모는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욕매거진 표지, 트럼프를 돼지로 묘사

미국 월간지 뉴욕매거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돼지로 묘사한 사진을 표지로 실었다.

2일(현지시간) 발행되는 뉴욕매거진 표지는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위로 돼지코를 합성했다.

이 사진 위에 쓰여진 헤드라인은 "공모가 아니라, 무능이 아니라, 잔인함이 아니라, 부패이며 어리석음이다. 그의 셀프 금융거래는 왜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인가?"다.

4월호 커버스토리를 쓴 조너선 차이트는 기사에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겠다는 그의 맹세는 거의 잊혀졌고 끊임없는 뉴스 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트럼프에 대한 모든 나쁜 소식이 다른 나쁜 소식에 계속 가려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름끼치는 농담이 아니라 타당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기존 지침을 위반했다"라며 "로비스트들은 모든 기관에 작성을 하고, 소비자로부터 직원 및 기업주들에게 더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낸다"고 덧붙였다.

미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커버스토리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인사교체와, 그와 그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해외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타임지는 지난 1월22일 발행한 잡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가 불에 타오르는 듯 묘사했고, 독일의 유명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1월13일 '진화하는 인간'에 빗대 트럼프 대통령을 '퇴화하는 인간'으로 묘사했다.

멕시코 교도소서 폭동, 진압 경찰 7명 사망

멕시코 중동부 베라크루스주(州)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베라크루스주 당국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베라크루스 동부 아미틀란 데 로스 레예스 소재 라 토마 교도소에서 전날 밤부터 발생한 재소자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폭공 과정에서 도구를 탈취한 수감자들이 이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며 "재소자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그러나 폭동 원인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재소자들이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경찰관이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멕시코 교도소의 폭동 및 탈출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6월에도 교도소내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AFP통신은 멕시코 범죄조직이 부패한 공무원과의 공모로 교도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지리공감코리아(주) | 서울특별시 | 전화 062)224-5800 | 팩스 062)222-5548

湖南新聞

국민 49% "軍병사 일과 후 외출 반대"

국민 절반가량은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최근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후 약 3시간 가량 외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리얼미터가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면 반대한다'는 49.2%로 집계됐다. '병사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36.9%로 분석됐다. '잘 모름'은 13.9%였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병역 대상이 포함된 20대에서 '조건부 찬성' (53.0%)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50대(67.2%)와 60대 이상(51.4%)에서는 '전면 반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 서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반대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대구·경북(56.5%)과 대전·충청·세종(55.1%), 경기·인천(48.5%), 부산·경남·울산(47.4%) 등의 순으로 '전면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임의 전화설계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뉴스스



남해의 봄 2일 오후 경남 남해군 스포츠파크 내 바닷가를 끼고도는 산책로에 하얀 꽃이 피어 봄을 알리는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MB, 옥중조사 끝내 거부...검찰 "세번째 시도 무산"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다시 향했으나 이번에도 무산됐다.

지난 26일 첫 조사 시도 이후 세 번째 '옥중조사' 실패였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신 병수 첨단범죄수사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수사팀이 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신 부장 등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에 따라 설득 시도를 그만 두고 청사로 복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후 지난달 28일 첫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

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온종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대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다시 설득에 나섰다.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데다가 기소를 위한 충분한 수사가 이미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부사장 이동형씨 등을 추가로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1) 여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여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자신도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방식 등을 두고 김 여사 측과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뉴스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vs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42%p 감소,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